

자유칼럼

중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차단벽으로 이용할 뿐

북한이 한창 핵무기를 개발할 때 중국은 북핵6자회담을 주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자기들에게 달렸다는 양 으스댔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베이징에서 6차례 걸쳐 열린 북한 핵문제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야말로 무위도식, 중국측 호텔에 숙박비만 지불했을 뿐이다. 북한은 그 기간에 담담타타(談談打打) 전술을 전개하여 핵개발의 기초를 다졌다. 그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김정일은 핵실험에 돌입했고, 뒤이어 김정일은 수소탄 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분명히 중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핵문제가 인류공동의 적대 행위라고 판단했다면 북한에 각종 제재를 가해서 목을 죄었

을 것이다. 즉 곡물과 원유 제공의 중단, 금융제재, 인력송출의 중단, 100여 개의 중국 내 북한식당 폐쇄, 중국인의 북한 여행과 무역의 중단은 물론 탈북자 보호시설 설치와 한국행의 보장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핵무기개발 중단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을 막을 가장 쉬운 봉쇄정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중국은 북한이 국력에 걸맞지 않는 핵무장에 온힘을 쏟아 국력이 피폐해져 자멸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향후 중국이 북한에 진출할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다. 고로 죽지 않을 정도로 옥수수과 원유를 공급해주면서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대미, 대남도발을 부추기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망해버리면

중국의 안보이익에 부담이 되기에 최소한의 원조로 대중의존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및 대량생산에는 중국산 각종 군수물자가 동원되어 중국은 수지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자국이 지원하고 판매한 무기성능 실험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의 이러한 간계를 모르고 우쭐대고 있다. 이러다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멸해버리거나 설사 미군의 대북 폭격으로 북한이 초토화 된다 해도 중국으로서 잃을 것이 없다.

도리어 북한 진주의 구실을 얻어낼 수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450개의 장마당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초기형태로 경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중국이 도와준 것으로 되기에 중국의 영향력

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울러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미군만 한강을 넘지 않는다면 중국은 통일이란 거대시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요즈음 중국이 사드배치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군을 남쪽에 묶어두려는 장기포석이기도 하다.

아무튼 현 단계에서 북한이 흥하던 망하던 중국은 북한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꽃놀이패로 이용하고, 남쪽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자유민주주의의 차단벽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 아무리 대북지원 중단을 요청해도 중국은 겉으로는 호응하는 척하지만 다양한 루트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이어주려 할 것이다.

노희상 | 자유통일연구원장

통일광장 ④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육은 통일준비의 시작

통일교육이 왜 중요한가?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의지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통일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문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만 큼이나,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하나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위함이다. 통일교육이 통일의 필요성, 통일 과정과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극단화되어서는 안 된다. 안보와 평화의 갈등논리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내용 확보에 장애만 초래한다.

북한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은 통일교육의 출발이다. 통일교육이 체제비판을 넘어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과 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인권 개선은 진

정한 의미의 통일준비임을 알림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담론 확장도 요구된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민족주의 통일패러다임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다.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복원이 아닌,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새로운 탄생이자, 제2의 건국이다.

통일담론의 확장을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현실성 있는 논의의 확산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통일교육의 기본내용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대비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지 제공 사회적 합의 이끌어기 위해서도 통일교육은 필수

전략, 북한인권실태와 국제공조 방안, 통일비용과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 주변국과의 통일외교 등 통일여건 개선 등의 내용들을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은층의 통일외식 변화 추이에 맞는 통일교육의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다르다. 통일이 이념이나 체제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현실적인 문제



◇통일교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극단화되어서는 안 되며 청년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통일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사진은 5월 2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5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통일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게 교양필수로 수강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 외 대학 내 통일선도대학 지정, 통일학과 졸업생의 취업 지원 등의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대비 차원에서 탈북자 인적자원을 준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윤태 | 통일전략연구소장, 통일학 박사

본 기사는 <자유마당> 2017년 4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임.